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7 백만 명이 넘는 이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2016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4.0 국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 내 허가 안내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amnesty.org

국제앰네스티 이외의 저작권자가 표시된 자료의 경우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2016년 초판 발행 국제앰네스티,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K



평양 당창건기념탑 앞에서 한 여성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2015년 10월 11일. © ED JONES/AFP/Getty Images

문서번호: ASA 24/3373/2016

원문 언어: 영어

amnesty.org

AMNESTY
INTERNATIONAL



목차

방법론	9
감사의 말	11
1. 북한 내 인권 및 정보의 자유	13
1.1 북한의 인권 상황	13
1.2 북한 법률 및 관행 상의 통신 및 정보 통제	15
이동전화 서비스	16
외국인의 휴대전화 사용	18
인터넷	18
영상 디스크 및 기타 시청각 데이터	19
라디오 및 텔레비전	20
1.3 일상적 감시	20
2.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23
2.1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23
2.2 외국에서 북한 내 가족과 친지에게 연락 취하는 경우	26
2.3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	30
3. 전화 사용 감시 및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체포	35
3.1 중국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감시	35
김정은 체제하의 감시 강화	35
휴대형 감시 장비 및 비밀 통화 녹음	38

3.2 자의적 체포 및 뇌물 갈취	41
4. 기타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 및 감시	45
4.1 휴대폰 이외 정보 출처에 대한 제한적 접근	45
4.2 외국 매체 이용에 대한 감시	48
체포 및 기타 결과	49
5. 국제법·기준상 북한 정부의 책무	53
6. 결론 및 권고	61
권고사항	62

요약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남아있다. 국가 지도자인 김정은은 정부의 모든 부문을 지휘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4년 2월,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이하 '북한인권조사위')는 인권의 전 영역에 걸친 침해행위가 기록된 372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는 여러 인권침해 중 특히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강제실종, 정치범수용소, 자국을 떠날 자유와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에 관한 측면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의사·표현·정보·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찬사를 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된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는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본 보고서 작성에 앞서 휴대폰 등 신기술 보급 확대에 인한 도전에 북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문서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본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이용자들이 기술적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주민에 대한 복합적인 통제, 억압, 위협을 강화해 통신과 정보의 출입에 대한 절대적인 독점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노력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외부의 상황을 알지 못하게 하고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경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할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근본적인 요소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인권침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등에서 다뤄진 자의적 처형이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수감과 같은 일부 인권침해에 비해볼 때 분명 덜 끔찍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통신 및 정보 교환에 대한 권리 제한은 사실상 북한 내 인권이 박탈된 일반적 상황에 근본적 원인이 된다.

본 보고서를 위한 연구는 북한 관련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대북 NGO 직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수행됐다. 또 본 연구에서는 북한 법률, 국내외 언론 보도, 유엔 보고서 및 학술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북한 정부는 모든 전기통신, 체신, 방송 서비스를 소유하며 북한 내 독립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선전선동부는 모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또 광범위한 기술적, 인적 감시를 통해 북한 내외부로 통신을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 같은 통제는 최근 북한 내부의 변화와 새롭게 보급된 다양한 전기통신 기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끝 무렵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회색시장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으로 식량을 밀수하던 상인들은 의류, DVD, 외국 TV 드라마, 영화, 휴대폰, 심카드 등도 반입했다. 이로써 중국 국경 인근에서 거주했거나 일했던 이들이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휴대폰은 회색시장 거래를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우체국에서 감시되는 회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외국에 있는 이들과 비밀리에 통신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도 북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휴대폰을 제조국과 무관하게 “중국 손전화”로 지칭하고 있다.

북한 외부에 있는 이들과의 통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타국 전기통신 기기의 사설 매매행위는 위법이며 “중국 손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통화 내용에 따라 혐의에 중개, 불법거래 혐의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한국이나 기타 적대국으로 분류된 국가에 있는 사람과 통화한 경우 반역죄와 같은 더 중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북한 정부는 북한 외부가 아닌 국내 통화만 허용되는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이집트 기업인 오라스콤과 합작투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가 3백만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국내의 웹사이트와 이메일 접속만 허용되는 국내용 폐쇄형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정부가 선언한 비상사태 기간 중 인터넷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타국 사례와는 달리, 북한은 자국민 대다수의 월드와이드웹 접속을 전면 차단한다. 북한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할 수 있다. 선불 심카드로 한시적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북한 내부 번호로는 전화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북한 내외부로 통신, 특히 “중국 손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방식을 기록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종류의 휴대폰을 사용해 북한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 또 북한 이탈 후 북한 내부로 전화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도달하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며 직접적인 최신의 직접 정보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북한인권조사위는 2014 년 보고서에서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휴대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17 명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17 명 중 대부분은 중국 이동통신망 접속이 가능한 접경지대 출신이었다. 이 중 9 명은 그 같은 종류의 휴대폰을 소유했던 가구 출신이었다.

김정은은 아마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2011 년 집권 이후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전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북한이탈주민 한국 입국자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인터뷰 대상자들도 월경행위 예방과 회색시장 거래 통제 강화를 위해 접경지대에서의 통신에 대한 유사한 통제 강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과 인터뷰 대상자 중 일부는 북한이 감시를 강화했고, 종종 중국 이동통신망 신호를 차단했으며 최신 감시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개인으로부터 나온 증언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특별조직이 “중국 손전화” 전파를 포착하기 위한 정교한 감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북한인권조사위의 조사결과를 확인해주었다. 감시 및 신호 교란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힌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 손전화”의 잠재적 사용자를 위협하려는 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감시는 오락 매체 등 다른 형태의 정보 공유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실시한 17 명을 비롯해 다수 학자, 인권 전문가, NGO 활동가들은 북한 정부가 국가 내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지속적, 조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북한 당국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받고 전할 자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 또 “중국 손전화” 사용자에 대한 감시, 위협, 억압을 강화하려는 것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제한은 반드시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와 평판의 보호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비례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국제전화 통화나 월드와이드웹 접속에 필요한 기술이 가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국제전화 통화, 외국 오락 매체, 인터넷 등 정보에 대한 완전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모호하게 규정된 법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자의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이러한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필요성,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제한으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간섭은 어떠한 간섭일지라도 법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러한 법률 자체도 여타 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증언들은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자의적 감시를 드러내주고 있다.

어떤 국가가 당국에 의해 적대국으로 여겨지는 경우라도 개인이 단순히 그 국가에 사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 나라에서 제작된 시청각 자료를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뇌물 갈취를 목적으로 한 모든 체포는 자의적 구금의 일종이며 국제법하에서 금지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구금을 면하기 위해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는 일반적 관행이 있음을 언급했으며 이는 북한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인터뷰 대상자 3명은 외국으로 전화를 하거나 외국 매체를 시청하다가 발각되었을 때 당국에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2명은 뇌물을 준 이후 풀려났다.

정보 접근권의 부재는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로 인한 혜택을 누릴 권리 등 광범위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당사국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국경이든 관계없이 개인의 고유문화 및 타문화 접근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할 “핵심” 의무도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법에 부합되는 명확히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회하고 국가 안팎의 개인 간의 방해받지 않는 정보 교류를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 북한 당국은 불필요하며, 불특정적이며 정당한 목적을 가지지 못한 자의적 통신 감시 및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자국 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게 월드와이드웹과 기타 인터넷 데이터 및 서비스나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완전하고 검열 없는 접속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정부는 더 나아가 북한 내 모든 사람이 국제인권법에 부합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외에는 북한 내 모든 사람이 외국에 있는 이들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과 간섭받지 않고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법론

그림 1 - 보고서 내 언급된 주요 도시 및 인터뷰 대상자 17 명의 출신 지역이 표시된 북한 지도.



주: 위 지도에서 사용된 경계선, 이름, 명칭은 이를 국제앰네스티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북한 내부의 제약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에서의 독립적 인권 조사는 불가능하다. 북한 내 주민들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터뷰를 원격으로 진행한다 해도 이는 이들을 체포와 구금 등 보복받을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현재 북한 외부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 북한 관련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대북 NGO 직원과의 인터뷰를 비롯해 유엔이 작성한 보고서, 수십 편의 학술지 논문 및 언론 보도 등의 2차 자료 검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 주민은 북한을 이탈한 이후에도 자신과 남겨두고 온 가족 구성원의 신변에 대해 우려하게 된다. 인터뷰에 동의한 개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의 신원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이상 가명으로 처리됐다. 또한, 이들의 출신지나 가족 구성원의 직업도 북한 당국에 의한 보복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부 경우 다르게 기록했다.

인터뷰는 2015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대한민국 서울, 대구, 아산, 일본 도쿄 및 오사카에서 진행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내외부에 사는 개인 간 전화 사용 통신 실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이와 같은 통신 방식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북한을 떠나기 전에 휴대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북한 이탈 이후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한 경험이 있는 사람 17명을 찾을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휴대폰 사용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 북한 당국에 의한 실제 제한 조치에 관한 가급적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최근 북한을 이탈한 사람을 찾았다. 인터뷰 대상자 17명 중 대부분은 2009년 또는 그 이후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17명 중 14명)이며, 대개가 중국 접경지대인 룡강 및 함경북도 출신(17명 중 13명)이었다. 이는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쉽게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다 쉽게 북한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휴대폰 상인 등 개인 상인들과 휴대폰을 다뤘던 전기 엔지니어도 포함되었다.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정보는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진술이 거짓된 것이거나 적어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던 사례가 존재하며, 가용 정보는 여타 관계된 당사자들에 의해 오용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평가돼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사용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수집, 평가, 분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알려진 NGO와 증명된 기록을 보유한 사람들만을 상대했다. 이 중 대다수는 감사의 말에 언급되었다. 북한에 거주했던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진위확인을 위해 북한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나 기타 2차 출처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직원 및 전문가 총 19명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는 당사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환경에서 진행됐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는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금전적 보상이 제공된 경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교통비 및 음식비에 한정된 것이었다. 인터뷰

대상자 전원은 인터뷰에 동의했으며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서 고지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내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의 대주주인 이집트 통신기업 오라스콤텔레콤미디어애펜테크놀로지 Orascom Telecom Media and Technology Holding S.A.E.와도 접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보내 국제 및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등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그에 대한 제한 사항, 또 당국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사용자가 이용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했다. 2016 년 2 월 초 현재까지 오라스콤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제앰네스티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2 차 서한을 보냈다.

감사의 말

국제앰네스티는 본 보고서 집필에 도움을 준 미래나눔재단, 대구하나센터, 데일리 NK, 링크 Liberty in North Korea,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PSCORE, 북한난민을위한생명재단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12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중국-북한 국경에 세워진 이동전화 마스트 타워. 철책 왼편이 중국이며
오른편이 북한이다. (출처: 박석일, 링크^{LiNK})

1. 북한 내 인권 및 정보의 자유

“적들이 끈질기게 들이미는 자본주의 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 중 3 중으로 든든히 치면서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 8 차 사상일꾼대회 연설 중, 2014 년 2 월 24 일.

1.1 북한의 인권 상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남아 있다. 2014 년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이하 '북한인권조사위')는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실종, 정치범수용소 관련 인권침해를 비롯해 생명권, 식량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 등 거의 모든 범주의 인권침해를 드러낸 상세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¹

사람들이 불공정 재판을 받고 수감되거나 아예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감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들의 가족 역시 집단 처벌의 일종인 “연좌제”로 수감된다. 북한인권조사위는 인권침해 행위 중 다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 조사위는 이 같은 범죄 및 기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¹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2014 년), para 13.

북한 정부는 조사위원들에 대한 제한 없는 방북을 허용하지도,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북한인권조사위의 조사활동에 전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 조사위는 여러 조치 중 특히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고려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책무성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12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초의 논의에서 북한인권조사위가 조사를 위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북한 당국이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에 북한 내 방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해명토록 지원하고 북한이 독립 조사관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토록 권고하라고 촉구했다.² 북한 인권 상황은 201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시금 논의되었으며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안보리에서 북한 내 계속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³

북한 내 인권 실태는 어느 정도는 북한 내 독립 언론이 존재하지 않고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오랫동안 불명확했다. 정보접근권의 부재와 그로 인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어떠한 종류이든 다양한 다른 인권의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은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누릴 권리와 같은 광범위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기타 인권의 실현을 촉진하는 동인 enabler이 된다.⁴ 국경 너머의 정보를 접할 수 없다는 점 외에도 여전히 북한 사람이 처형, 고문, 강제노동, 기타 부당대우와 같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외부 세계에 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을 떠나지 않는 한 그 같은 일은 불가능하며 북한을 떠난 경우에만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북한 사람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없으며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것은 위법이다. 발각되어 송환된 이들은 잔혹한 대우를 받게 된다. 북한 형법 제 221 조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그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수감자들의 증언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해주었으며 이들은 수용소에서 초법적 처형, 고문, 고된 강제노동, 기타 부당대우에 처해졌다.⁵ 국제앰네스티는 이 같은

²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기록, S/PV.7353, 2014년 12월 22일, 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s_pv_7353.pdf (2015년 9월 14일 접속)

³ 유엔 뉴스 센터, “유엔 인권 수장,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다”, 2015년 12월 10일, 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2791#.VmuUeEp94dU (2015년 12월 12일 접속)

⁴ 유엔 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프랑크 라 퀴 Frank La Rue, UN doc. A/HRC/17/27, 2011년 5월 16일, para22,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7_en.pdf (2015년 11월 20일 접속). 제 5장 참조.

⁵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2014년)

수용소의 존재,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수용소의 규모와 시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위성 사진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1.2 북한 법률 및 관행 상의 통신 및 정보 통제

최근까지도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거의 절대적인 정보통제와 이용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정보의 강력한 통제로 외부 세계와의 정보교환에 극심한 제한을 받았다.

북한 헌법에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구(제 67 조)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세계인권선언 제 19 조)를 포함하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같은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북한 헌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고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성을 명시하고 있다.(제 79 조).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국가 및 법률제도에 대한 통치권이 조선노동당에 있다. 헌법 제 11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련 당규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한다고 규정해 당의 절대적 지도가 국가의 창건자인 김일성의 지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⁷ 이에 따라 국가의 지도자의 지시사항은 모든 법률에 우선하며 이 같은 점은 북한의 보안기관이 법률이나 국민을 섬기기보다 지도자에게 복종한다는 점에서 확증되고 상황을 악화시킨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기타 인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 지도자의 지령이나 당 지침에 종속적이기때문에 인권의 향유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김정은은 사상일꾼대회 연설에서 “적들이 끈질기게 들이치는 자본주의 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 중 3 중으로 든든히 치면서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⁸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정보교류를 제한하고 가로막으라는 정치적 지침이 매우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⁶ 국제앰네스티, 북한: 새로운 위성 사진으로 탄압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드러나다 (문서번호: ASA-24/010/2013); 국제앰네스티, 북한: 새로운 위성 사진에서 정치범 수용소와 주민 거주지 경계 흐려져(문서번호: ASA-24/004/2013); 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치범수용소(문서번호: ASA-24/001/2011)

⁷ 켄 가우스 Ken Gause, *강압과 통제, 감시 그리고 처벌: 경찰국가 북한에 대한 고찰*, 북한인권위원회, 2012 년, www.hrnk.org/uploads/pdfs/HRNK_Ken-Gause_Web.pdf (2015 년 10 월 15 일 접속)

⁸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 8 차 사상일꾼대회 연설, 평양, 2014 년 2 월 24 일. www.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4/02/26/kim-jong-un-addresses-ideology-officials-conference-and-attends-photo-op/ (2015 년 12 월 11 일 접속)

북한은 헌법(제 21 조) 및 체신법(제 1 조 및 제 2 조)에 규정된대로 전기통신, 우편, 방송의 소유권을 포함해 모든 정보의 내용과 통신수단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⁹ 체신법 제 37 조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이 무선방송설비나 위성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단 참조)

북한에는 독립적인 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 모든 매체의 내용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의 신문과, 방송과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¹⁰ 이러한 독점 체제 및 통신수단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북한 당국은 자국민에게 어떤 정보를 접하게 할 것인지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었다.

감시되지 않는 통신과 독립적 정보 접근권의 부재가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기록된 구금시설 내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같이 절박한 사안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우려에 해당하며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기타 인권침해와 본질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이동전화 서비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1990년대 말 이래로 성장한 비공식 사설 경제활동은 북한 내에서 상당한 변화로 이어졌다. 식량 중앙배급체계 붕괴의 결과로 회색시장 grey market이 일반적인 식량과 수입의 원천이 되었다. 상인들은 중국에서 식량, 옷, 기타 상품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심카드도 들여왔고 이는 국경 근처 사는 사람들이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북한 외부세계와 직접 통신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북한 내에서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휴대전화는 제조국에 관계없이 보통 “중국 손전화”로 불린다. 이런 종류의 휴대전화는 정부 관료가 아닌 일반 주민이 국내용 유선전화 회선 상의 제약에 묶이지 않고 외부세계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북한 정부는 아마도 “중국 손전화”의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2008년 합법적인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지금까지도 외국인과는 달리 자국민에게는 국제전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2002년에 한 차례 이동전화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으나 원격조정 무선 단말기로 기폭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평안북도 용천역 대형 폭발 사고 이후인 2004년, 급작스럽게 휴대폰 금지령을 내렸다.¹¹ 현재 이동전화

⁹ 국제앰네스티 자료 번역

¹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2014년), paras 205-207.

¹¹ 피터 네스빗 Peter Nesbitt, *한국에 대한 떠오르는 주장들: 북한 내 새로운 동향*(2011), 한미합동학술연구, 한미경제연구소, www.kei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emergingvoices_final_peternesbitt.pdf (2015년 10월 15일 접속)

서비스는 합작투자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인 고려링크를 통해 제공되며 사업 개시 단계부터 북한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간섭을 받고 운영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현재 국내망 휴대전화는 큰 인기를 끌어 서비스 가입자가 3 백만 명에 달하고 네트워크 커버 범위가 북한 인구 2500 만 명의 94%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되었다.¹² 고려링크는 이집트 기업인 오라스콤텔레콤미디어엔테크놀로지 Orascom Telecom Media and Technology Holding S.A.E.(오라스콤)와 북한의 국영 기업인 조선체신회사 간의 합작 회사다. 모든 전기통신 사업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앞서 언급된 헌법상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합작회사는 현행 북한 법체계에서 허용된다. 북한 헌법 제 37 조는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합작회사인 고려링크의 75%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오라스콤은 25 년간의 사업권과 2008~2012 년까지 4 년간의 독점사업을 따냈다. 2015 년 11 월 발표된 성명에서 새로운 국영 이동통신 사업자가 고려링크와 합병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고려링크의 대주주인 오라스콤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성명에서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에 대한 통제권 행사와 수익금을 밖으로 가져 나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며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이유로 들었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책임에 관한 유엔 프레임워크 상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유치국의 인권 존중 능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기업이 인권침해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주의의무 *due diligence* 절차를 포함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 포함된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¹⁴ 유엔은 도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 국제인권, 특히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역할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⁵ 이 같은 책임은 기업의 활동뿐 아니라 그

¹² 로이터, "고립 속 북한의 수도에서 번영의 빛이 잠시 비추다", 2015 년 10 월 8 일, www.reuters.com/article/2015/10/08/us-northkorea-anniversary-idUSKCN0S21KK20151008 (2015 년 10 월 15 일 접속).

¹³ 오라스콤,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북한 자회사 고려링크의 개정된 회계처리안 채택 및 벨톤 인수 완료를 발표하다", 성명서, 2015 년 11 월 15 일, www.egx.com.eg/downloads/Bulletins/182837_2.pdf (2015 년 11 월 25 일 접속)

¹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2011),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제 17/4 호에서 승인, UN doc. A/HRC/RES/17/4, 2011 년 7 월 6 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프랑크 라 루* *Frank La Rue*, UN doc. A /HRC/17/27, 2011 년 5 월 16 일, paras 44, 45, 76,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7_en.pdf (2015 년 11 월 20 일 접속)

¹⁵ 유엔 인권이사회,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UN doc.

영업상 맺고 있는 관계에까지 확장된다. 기업은 자사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휴대전화 사용

북한 정부의 경화(hard currency) 수입 필요성 때문에 촉발된 것이지만 북한 당국은 2013년에 외국 국적자가 평양 공항에서 국제전화(한국 제외)를 걸고 받을 수 있으며 타국에서처럼 월드와이드웹 상 인터넷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현지 심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5년 7월 현재 3G 선불 심카드의 가격은 미화 80달러이며, 통화하는 국가별 요금에 따라 분당 잔여 통화량이 차감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데이터 요금은 2GB 당 미화 200달러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¹⁶ 이 같은 서비스는 외국인 전용이며 국내 전화 연결은 할 수 없다. 일반 북한 사람이 국외로 전화를 하려면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거나 북한 전화로 여러 가지 임시변통식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북한 정부는 외국 여행객이 구매한 모든 심카드가 출국시 비활성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외국인이 남겨두고 간 선불 심카드가 들어있는 전화기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해외로 전화를 거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¹⁷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게 국제전화 및 데이터 서비스를 판매해 경화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일반 대중에게는 그 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준다.

인터넷

북한 내에서 인터넷 접속 기술 자체는 가용하지만, 실제 인터넷 접속은 외국인 및 국가 내 선택된 소수만 할 수 있다.¹⁸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인터뷰 대상자 중 북한을 떠나기 전에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단 한 명이 군에 있던 자신의 삼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A/HRC/27/37, 2014년 6월 30일, para 44.

¹⁶ 코리아헤럴드, “북한 외부로 흘러나가는 정보의 흐름에 인스타그램이 합류하다”, 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708001010 (2015년 10월 15일 접속).

¹⁷ 로이터, “북한, 관광객이 사용하던 전화기용 심카드 단속 강화”, 2014년 9월 1일, www.reuters.com/article/2014/09/01/us-northkorea-mobilephone-idUSKBN0GW1MC20140901 (2015년 10월 15일 접속).

¹⁸ 노스코리아테크, “평양과학기술대학 내 인터넷 접속, 컴퓨터, 첨단기술생활”, 2014년 1월 30일, www.northkoreatech.org/2014/01/30/internet-access-computers-and-high-tech-life-at-pust/ 2015년 10월 15일 접속)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북한 주민의 경우 국내적으로는 “컴퓨터망”으로 알려져 있는 폐쇄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는 “인트라넷”이라고 종종 잘못 보도되고 있다.¹⁹ 이 네트워크는 북한 내 사용자에게 한정된 사실상의 폐쇄형 인터넷으로 국내 웹사이트 및 이메일 접속만을 제공하나 인터뷰 대상자 중 아무도 이 네트워크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일반 대중의 월드와이드웹 접속이 완전히 차단된 북한 내부의 상황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내용에 기반한 웹사이트 차단²⁰이나 정부가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시기 동안의 일시적 접속 차단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인터넷 제한 조치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다. 이 같은 전면적 접속 차단과 가용 기술의 이용을 소수 엘리트 집단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라는 용어에 한층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²¹

영상 디스크 및 기타 시청각 데이터

사실상 모든 북한 주민에게 월드와이드웹 인터넷은 금지된 영역이지만, 회색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가족 및 친구 사이에 돌려보거나 복사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미디어 콘텐츠가 담긴 영상 디스크와 USB 디스크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영상 디스크는 가격이 낮다는 점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국외에서 생산된 시청각 자료를 접하는 대중적인 방법이 되었다. 이 같은 기록 미디어의 사용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평양 내 공공 컴퓨터실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해 외국 영상을 관람하지 못하도록 해당 시설을 폐쇄했다.²² 하지만 가정집에서 영상 디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더 어렵다. 미국 방송이사회 US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의 의뢰로 2010 년 과거 북한에 살았던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외부세계의 매체를 접하는 가장 흔한

¹⁹ 일례로 다음 참조. 노스코리아테크, “북한 내부 인트라넷 들여다보기”, www.northkoreatech.org/2015/07/06/a-peek-inside-north-koreas-intranet/ (2015 년 11 월 18 일 접속). 이와는 달리 인트라넷은 통상 단일 조직 내부에서 범위가 명확한 집단이 공유하는 콘텐츠 묶음으로 정의된다.

²⁰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34 호: 의사·표현의 자유, UN doc. CCPR/C/GC/34, 2011 년 9 월 12 일, para 43.

²¹ 유엔 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프랑크 라 루이 Frank La Rue*, UN doc. A /HRC/17/27, 2011 년 5 월 16 일, paras 49, 61,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7_en.pdf (2015 년 11 월 20 일 접속)

²² 국제앰네스티와 남수(가명, 30 대 남성, 2011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3 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진행됐다. 인터뷰 당시 공공 컴퓨터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한국어 단어는 “PC 방”으로 말 그대로 “컴퓨터실”을 뜻한다.

형태는 DVD 로 나타났다.²³

라디오 및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북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미디어 플랫폼이다. 미국 방송이사회 의뢰로 수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북한에 있을 때 텔레비전을 시청했다고 밝혔으며, 시청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1/3 은 외국 콘텐츠를 시청했다고 말했다.²⁴ 북한의 경우 한국,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대나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가구가 접경 국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에서 송출되는 내용에 북한 정부가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의 종류에 관한 엄격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 중국 등지에 송출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제품을 들여오고 있다.

1.3 일상적 감시

앞서 언급된 제한적 경로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지만, 북한은 본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기술된 바와 같이 통신을 감시하고 방해할 수 있는 다수 방법을 개발했다. 이와 동시에 다수 법률이 외부 세계와의 정보 교환을 시도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구금하고, 기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다뤄진 내용 외에도 제 3 장과 제 4 장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감시 방식의 도입 이전에는 외부세계 매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이웃감시제도인 인민반과 같은 “일대일”식의 전통적인 사회통제방법에 의존해왔다. 넓은 의미에서 “이웃” 또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옮길 수 있는 인민반 제도는 1945 년 광복 이후에 만들어졌다. 인민반은 조선노동당의 지시하에 운영되며 보통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인민반장을 임명한다. 인민반장은 출신 성분이 “좋아야”하며 국가보위부 및 인민보안부 요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해야 한다.²⁵

현재 인민반은 보통 같은 지역이나 아파트 건물 내 20~40 개 가구로 구성된다. 각 인민반은 소속 반원 감시, 사상교육, 다양한 활동에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통로 역할을 할 의무를 진다. 모든 북한 주민은 인민반에 소속되어야 한다. 인민반은 주 1, 2 회 모임을 가지며 각 가구 대표가 참석하는데 이는 보통 집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인

²³ 넷 크렛천 Nat Kretchun, 제인 킴 Jane Kim, “조용한 시작: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의 북한 주민”, 인터미디어, 2012 년, www.intermedia.org/a-quiet-opening-in-north-korea/ (2015 년 10 월 15 일 접속)

²⁴ 크렛천, 킴, *조용한 시작*.

²⁵ 켄 가우스 Ken Gause, *강압과 통제, 감시 그리고 처벌: 경찰국가 북한에 대한 고찰*, 북한인권위원회, 2012 년, www.hrnk.org/uploads/pdfs/HRNK_Ken-Gause_Web.pdf (2015 년 10 월 15 일 접속)

경우가 많다. 인민반장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주민의 행동이나 사적인 관계를 면밀히 감시하며 가정집을 아무 때나, 낮이나 밤이나 방문할 권한을 가진다.

기존 인민반 제도 외에도 북한 정부는 최근 “중국 손전화”로 외국으로 전화를 걸거나 기타 매체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 사람을 적발할 전담 조직을 창설했다. 인터뷰 대상자들 역시 기술적으로 진보된 감시 장비 사용이 증가했다고 말했으며 이들 장비 중 일부는 타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통화를 녹음하거나 휴대전화 신호를 교란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신 감시가 더 심각해졌지만, 동시에 개인이 국가 외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제한적 채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2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2.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사업 때문에 휴대폰을 썼지만 다른 사람들이 돈을 전달하도록 하거나 친척들과 연락하는 것을 돕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하지만 (...) 절대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광일(가명), 2013 년 북한을 이탈한 40 대 남성. 현재 대한민국 서울 거주 중.

2.1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제 1 장에서 간략히 다룬 바와 같이 북한 정부는 휴대폰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감시되지 않는 국제전화 통화는 특히 하기 어렵다. “중국 손전화”의 등장 이전 대다수 북한 사람들은 국제전화 통화를 하려면 그 지역의 우체국에 가야만 했다. 특정 정부 기관은 국제전화망에 연결되어 있지만 거기서조차 국제전화 사용은 엄격히 통제됐다. 50 대 여성인 지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에 친척이 몇 명 있었습니다. 2005 년까지는 지방 우체국에서 요금을 내고 공식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005 년 이후로 전화를 하려면 공식 신청서로 신청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 어떻게 상대를 알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할 것인지를 적어야 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만 전화했지만 일본, 미국에 전화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왜

*바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²⁶

최근 몇 년간 국제전화 통화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화된 것은 아마도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2011 년 김정은 집권 이전에 나타나던 경향이지만 그 이후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줄어들었다. 우체국 통화가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이탈한 가족, 친척, 친지에게 공식 서비스를 이용해 연락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다. 이들을 당국에 체포될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접경지대에서 “중국 손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 기회를 이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북한 주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실시한 17 명 중 12 명은 북한을 아예 떠나기 전에 “중국 손전화”를 사용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9 명은 “중국 손전화”를 소유한 가구 출신이었다. 이들 가구들은 직접 이런 종류의 휴대폰을 구매했거나 회색시장에 관계되어 있던 이들의 경우는 중국 내 사업 파트너로부터 휴대폰을 받았다. 앞서 언급됐듯 타국 전기통신 장비의 사적인 거래는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체신법 제 37 조)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2011 년 이후)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회색시장에서 중국제 휴대폰과 심카드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카드의 가격은 국제 표준에 비해 비싸지 않지만 2011 년 북한을 이탈한 박문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내 물가나 임금 대비 가치로 볼 때는 꽤 값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불법 밀수꾼들이 들여온 심카드는 충전액에 따라 인민폐 100 위안(중화인민폐 또는 위안화, 미화 약 16 달러) 전후로 팔립니다. 그건 상당한 금액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10 개월 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그 돈으로 식량을 사면 한 사람이 한 달 치를 먹을 수 있는 양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²⁸

개인용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중국 손전화”를 빌리는 것을 언급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역시 매우 위험한 일이다. 40 대 여성 연화에 따르면 휴대폰 주인이 월경행위로 보위부원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휴대폰을 빌려 쓴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휴대폰 주인이 조사 도중 휴대폰을 빌려준 사실을 실제로 자백하면 빌려 쓴 사람도 체포됐습니다. 휴대폰 주인이 조사받은 것도 갑자기 씹숨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²⁶ 국제앰네스티와 지은(가명, 50 대 여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21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²⁷ 제 1 장 참조.

²⁸ 국제앰네스티와 박문(가명, 20 대 남성, 2011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2 월 26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언가를 살 수 있게 되면 조사대상이 됩니다.*²⁹

“중국 손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 “브로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는 브로커 조직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송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들 브로커들은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통신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북한 내부로의 송금이 포함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인 주양의 경우 북한에 거주 중일 당시 아버지와 연락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활용했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제)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브로커는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브로커는 아버지가 보낸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미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에서부터 브로커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브로커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브로커에게 연락해 저를 찾아가게 했습니다.”*³⁰

전화 및 송금 브로커 조직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이들에 따르면 양쪽 통화자 2명 외에 브로커 조직은 보통 최대 3명의 중간자들로 구성된다. 중국 국적자 1명(A),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사람 1명(B), 북한 국적자 1명(C). 일반적으로 통화연결은 송금과 함께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중국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북한 주민에게 전화를 하려면 브로커 조직을 통해 최소 한화 백만 원(미화 약 900 달러)을 송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 A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완료되면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B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C에게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불하게 한다. 그 이후 C는 송금액을 수취인에게 전달한다. 중국 국적자인 B가 중국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동안 중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화를 주선할 수 있다.³¹

²⁹ 국제앰네스티와 연화(가명, 40대 여성, 2013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³⁰ 국제앰네스티와 주양(20대 여성, 2010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2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³¹ 국제앰네스티와 수예(가명, 20대 여성, 2014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거래비용의 경우 브로커 조직에 속한 3 인이 전체 송금액의 10% 수수료를 각각 받게 된다. 따라서 총 수수료는 송금액의 30%에 달한다. 다른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B, C 의 역할을 혼자 담당하고 수수료로 20%를 받는 브로커도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중국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북한 주민의 경우 송금인이 상당액을 송금하고 30%의 수수료를 낼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북한을 떠난 가족이나 친척과 통화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부 경우 송금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³², 송금하는 사람은 송금액의 나머지 70%도 전달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³³

브로커는 이외에도 정보 전달자로 기능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가족들이 한국에서 재결합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가족과 만나게 되면 브로커가 필요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³⁴

2.2 외국에서 북한 내 가족과 친지에게 연락 취하는 경우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타국에 도착하면 가족과 친지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고 싶어 한다. 안부를 전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북한 내 수신자가 “중국 손전화”를 소유하고 있거나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신의 가족이 이미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보내려 할 것이다. 일단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이 되면 휴대폰 모델에 따라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전송받을 수도 있다.

한국 소재 온라인신문인 데일리 NK 기자 강미진은 북한으로 휴대폰을 보내고 연락을 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탈북자(북한을 이탈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실제 휴대폰을 보냅니다. 제 경우는 최근 북한으로 스마트폰 2대를 보냈습니다. 이런 휴대폰은 단지 사업용이 아니라 가족과 연락을 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중국제 스마트폰하고 똑같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거기에 중국 심카드를 넣고 중국 앱들을 설치해놔서 중국폰처럼

³²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2014 년. , uskorea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4/03/Kim-Yonho-Cell-Phones-in-North-Korea.pdf (2015 년 10 월 15 일 접속).

³³ 국제앰네스티와 지은(가명, 50 대 여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21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³⁴ 국제앰네스티와 조동현(30 대 남성, 200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2 월 26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보입니다. 우리는 카카오톡(한국의 채팅 앱)만 사용합니다.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지만, 요금이 비싸게 나옵니다.³⁵

휴대폰은 공식적인 우편 경로로 전달되지 않고 보통 국경 지역의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인 소경은 최근 몇 년 사이 국경지대 경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거치는 것이 더 비싸졌다고 언급했다.

“(군인들이) 우체부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절실하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보냈을 때는 인민폐 1000 위안 정도를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그 정도 값어치의 물건으로 썼습니다. 요즘은 뇌물액이 미화 500 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시가 강화돼 군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커지면서 뇌물액수가 올라간 것입니다.³⁶

북한으로 휴대폰을 “보내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브로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편을 택한다. 브로커는 이들의 북한 내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전해주고 동시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접경지역에 거주하던 여성인 해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휴대폰은 돈벌이용으로 사용됩니다. ‘중국 손전화’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한화로 백만 원(미화 약 900 달러)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은 송금을 조건으로 걸고 브로커 비용을 받습니다... 제 아이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었겠죠. 지금으로써는 북한 내에서 ‘중국 손전화’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밀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³⁷

³⁵ 국제앰네스티와 강미진(현재 데일리 NK 기자, 40 대 여성, 2009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4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³⁶ 국제앰네스티와 소경(가명, 40 대 여성, 2005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24 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다. 미화 500 달러는 인민폐로 약 3,150 위안이다. 즉, 최근 몇 년 사이 뇌물액수가 3 배 가까이 된 것이다.

³⁷ 국제앰네스티와 해주(가명, 40 대 여성, 2012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3 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진행됐다.



조동현(30 대 초반)은 2003 년 북한을 이탈했다. 그는 인터뷰 당시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북한으로 전화를 했던 경험이 있는 12 명 중 (이 질문은 14 명에게만 했다) 6 명은 통화를 하려는 상대가 "중국 손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를 했다. 이 중 30 대 남성인 조동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아무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할 때면 중국 브로커에게 연락하면 그 브로커가 접경지대에 (중국제) 휴대폰을 가진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해야 할 때마다 (중국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16 ~ 20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³⁸

³⁸ 국제앰네스티와 조동현(30 대 남성, 200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2 월 26 일

상당액을 송금해야 하는 것 외에도 북한 내 이들의 가족들은 감시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또 돈을 전달받고 브로커의 휴대폰으로 송금을 확인해주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집이 국경지대로부터 다소 떨어진 지역에 있던 명진의 경우 감시 때문에 가족이 돈을 받아 올 수 없었다.

"2, 3 번가량 가족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똑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송금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감시 때문에 돈을 받으려 신의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³⁹

"중국 손전화"를 소유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중개 행위도 형법상의 불법행위(제 112 조, 세부적인 내용은 제 3 장 박스 기사 "비인가 통신 처벌" 참조)지만 국제전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도청이나 체포를 당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애당초 처벌 규정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주로 무역상으로 일했던 광일의 경우 "중국 손전화"를 소유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사람 중 하나였다.

"저는 사업상 목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돈을 전달하거나 친척들과 통화하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 서로 알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느낌이 오지만 결코 서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⁴⁰

이러한 증언들과 기타 발표된 보고서들을 통해 밝혀졌듯이 북한 정부는 북한 외부로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반대로 북한 외부에서 내부로 연락을 취하려는 이들에 대한 제한을 점차 더 강화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한 국제전화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북한 정부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정기적으로 연락할 기회를 빼앗고 국경과 관계없이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박탈했다. 더욱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을 시도한 사람은 감시 및 자의적 체포를 당하게 됐다.

북한으로의 전화통화: 한국에서 기소될 위험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14 년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의 수는 27,000 명을 웃돈다.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 주민의 수는 90 년대 중반부터 2011 년까지 증가해왔지만 2012 년 이후로는 연간 2,500 명 이상에서 연간 1,500 명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³⁹ 국제앰네스티와 명진(가명, 40 대 남성, 2014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9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⁴⁰ 국제앰네스티와 광일(가명, 40 대 남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8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할 목적의 시설 내 거주공간에서 몇 달을 보낸 뒤 한국의 시민이 된다.

한국 거주자가 북한 주민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한국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보안법에는 북한과 관련된 사람과 연락하는 행위에 관한 조항 등 매우 모호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⁴¹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8 조, 법률 제 4373 호로 개정된 것, 1991년 5월 31일)

한국 정부는 20년 전인 1995년 국제 통신회사인 AT&T가 최초로 고객들이 북한으로 장거리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자국민은 전화나 팩스를 통한 북한 주민과의 통신에 앞서 통일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²

그렇지만 한국의 인권변호사 장경욱에 따르면 실제로는 단순히 휴대폰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불법인 이 같은 통화 내역은 통화를 한 사람들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북한에 입국하는 등의 기타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 범죄혐의에 추가될 수 있다. 또 장경욱 변호사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신고된 경우 당국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수사할 의무를 가지지만 동시에 당국이 매우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북한 외부로 유출되는 중요한 채널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⁴³

2.3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

인터뷰 대상자 17명 중 10명이 북한을 떠나기 전 고려링크를 통해 서비스되는 북한 이동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인터뷰 조사결과는 북한 내 국내 이동전화 서비스의 인기를 반영했다. 이 중 9명은 휴대폰을 소유한 가구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평균 소득 수준에 비해 휴대폰 소유에 드는 비용은 매우 높다고 할 수

⁴¹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문서번호: ASA 25/006/2012).

⁴² 김경현, *한국영화의 재남성화*, 듀크대출판부, 2014, p286

⁴³ 국제앰네스티와 인권변호사 장경욱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12월 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있으며, 이에 대해 40 대 여성인 연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⁴⁴

“딸의 휴대폰은 인민폐 3,000 위안(미화 475 달러)에 샀고, 제 폰은 인민폐 1,000 위안(미화 158 달러)에 샀습니다. 3,000 위안은 시장에서 옷가지 상인의 두 달치 수입입니다. (딸의 휴대폰은) 스마트폰 같은 최고급 모델이었습니다. 딸의 반 친구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딸에게 그런 폰을 주고 싶었습니다. 딸의 친구 중 일부는 이런 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부의 상징입니다.”⁴⁵

북한의 젊은층에게 휴대폰은 사회생활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시골 지역 사람들 역시 휴대폰이 생활에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려고 돈을 모은다. 함경북도 시골 지역 출신인 대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휴대폰은 중요합니다. 상인들은 사업에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은 동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산에서 살고 벌을 키우는 우리 경우에는 날씨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날씨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미화 200 달러에서 500 달러 사이입니다. 월수입에서 아껴서 모은다면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미화 200 달러(북한 화폐로 160 만 원)까지 모으려고 얼마 전에 더 뽀뽀하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⁴⁶

다수 사람들이 휴대폰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금전적 어려움뿐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상의 부패로 인한 어려움에 관해 토론했다. 북한의 휴대폰 구매 희망자는 지방 체신관리국에 방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지방 경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인민보안부 보안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관리들은 모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쥐고 있는 재량권으로 개인적인 부를 쌓거나 뇌물을 요구할 기회를 노릴 수 있다.⁴⁷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 남성인 명진은 기다리기보다는 뇌물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공식적으로는 (휴대폰을 구하는 데) 6~8 달이 걸립니다. 저는 기다리기가 싫어서 (비공식적인 경로로) 그냥 샀습니다. 원래는 미화 150 달러 정도 들지만 저는 미화

⁴⁴ 북한의 1 인당 GDP 에 관한 공식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1 년 현재 기준 미화 1800 달러로 추정된다. 출처: 미 중앙정보부, “더월드팩트북”,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 (2015 년 12 월 1 일 접속).

⁴⁵ 국제앰네스티와 연희(가명, 40 대 여성, 2013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8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⁴⁶ 국제앰네스티와 대훈(가명, 50 대 남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3 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진행됐다.

⁴⁷ 데일리 NK, “여전히 ‘부자’의 장난감인 휴대폰”, 2014 년 6 월 5 일,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num=11930&cataId=nk01500> (2015 년 10 월 15 일 접속).

300 달러를 냈습니다. 공식적 경로는 까다롭고 서류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 보안부 방문도 해야 합니다.”⁴⁸

북한 주민들이 국내용 휴대폰을 구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통 관리들과 친분이 있는 “거간꾼”들이 제공하는 “급행 서비스”가 출현했다. 가구 내에서 휴대폰을 소유했다고 밝힌 9명 중 6명은 이들 “거간꾼”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했다. 20대 여성인 수예도 그런 경우에 해당했다.

“저는 새 휴대폰을 살 때 인민페 1,700 위안(미화 260 달러)을 냈습니다. 풀더형 휴대폰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장마당(시장)에서 샀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그런 휴대폰을 파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휴대폰을 파는 판매점이 있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개인(거간꾼 등)을 통해 구하고, 거간꾼이 서류작업을 도와줍니다. 휴대폰을 받는 데 보통 2~3일이 걸립니다. 정부에 연줄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합니다.”⁴⁹

명진에 따르면 “거간꾼”은 보통 정부 관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명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휴대폰 일정 수량을 ‘사업가’에게 할당하고 일반인들은 여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가’ 중 대부분은 조선노동당원의 아내, 보안원이나 보위부원의 아내입니다. 이들은 그 할당된 휴대폰을 팔아 돈을 벌니다. 이 ‘휴대폰 사업가’가 이 할당 수량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각 도시, 지방마다 일정 기간 내 할당된 휴대폰 가입자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⁵⁰

한미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이 “거간꾼”이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식량을 주고 이들의 개인 정보를 받아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등록해 다량의 휴대폰 명의를 습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거간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휴대폰 명의를 습득하고 이를 되판다.⁵¹ 이후에 이들은 등록된 명의를 단말기와 함께 이윤을 남겨 판매한다. 구입자들은 거간꾼이 아니면 휴대폰을 손에 넣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⁴⁸ 국제앰네스티와 명진(가명, 40대 여성, 2014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⁴⁹ 국제앰네스티와 수예(가명, 20대 여성, 2014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⁵⁰ 국제앰네스티와 명진(가명, 40대 여성, 2014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⁵¹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2014년, uskorea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4/03/Kim-Yonho-Cell-Phones-in-North-Korea.pdf (2015년 10월 15일 접속).

없다.

이 “거간꾼”의 행위는 북한 형법 제 167 조(2009 년 개정된 것)에 따라 처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2012 년 형법에서는 동 조항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었다.⁵²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당국은 이러한 “거간꾼”과 관리 사이의 친분 관계 때문에 거의 이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거간꾼”을 이용한 사람들 모두가 북한 단말기 구입에 (중화 위안이나 미화와 같은) 외화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점 역시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단말기 사업은 북한 정부가 외화를 거둬들이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로써 일부 사람들이 회색시장 거래의 급증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쌓아놓기만 하는 것을 예방하게 된다. 이는 관리들과 친분이 있는 “거간꾼” 무리의 단말기 판매를 보장함으로써 촉진되게 된다.

현지 사람들은 국내용 단말기를 가지고 국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한 가지 방법은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에게 “중국 손전화”를 가지고 국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한 뒤에 그 사람이 북한 휴대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제 3 자의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두 휴대폰을 마주 보게 놓으면 각각의 두 통화가 한 통화로 통합될 수 있다.⁵³ 2013 년 북한을 떠난 광일에 따르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북한 단말기를 개조해 중국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⁵⁴

이와 같이 국내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넣기에 매우 비싼데다가 비공식 경로를 통하면 더욱 비싼 값을 치뤄야 한다. 더구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자체는 해외에 사는 가족과의 연락이든, 단순히 외국의 발전상을 배우는 것이든 북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외부세계의 정보로부터 차단된다는 사실을 조금도 완화시켜주지 않는다. 국내용 휴대폰은 북한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 및 정보의 자유를 촉진시키지 않으며 자국민을 고립시키려는 국가의 계획적인 노력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 19 조는 세계인권선언 제 19 조에 포함된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일부로서 “...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하는

⁵² “리기적 목적으로 여러차례 승인되지 않은 전화를 설치하여주었거나 승인된 전화설치를 제때에 하여주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한 자는 2 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북한 형법 제 167 조, 2009 년 개정된 것)

⁵³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프레스 기자 이시마루 지로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27 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다.; 국제앰네스티와 연화(가명, 40 대 여성, 2013 년에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이 인터뷰는 2015 년 5 월 26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⁵⁴ 국제앰네스티와 광일(가명, 40 대 남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8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권규약 제 17 조는 모든 사람의 통신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보호된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세계인권선언 제 12 조 참조) 여기에는 전화를 통한 통신⁵⁵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 간 국경 내외부로의 통신이 포함된다. 감시되지 않는 국제전화를 불허하고, 국내용 휴대전화의 경우 국제전화를 일절 불허함으로써, 또 국제전화 시스템을 통한 모든 통신을 방해하고 처벌하려는 계획적인 노력을 기함으로써 북한 정부는 이 같은 권리의 보장을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전면적인 금지 조치 및 관행은 “국가안보”나 기타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⁵⁵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16 호: 사생활에 대한 권리, UN doc. CCPR/C/GC/16, 1998 년 9 월 28 일, para 8. 제 5 장 참조.

3. 전화 사용 감시 및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체포

“제 어머니의 친구는 통화 내용이
발각돼서 단련대에 끌려갔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는 체제 비판이 아니라
(통화 중에) 돈을 달라고 해서였습니다.”

종희(가명), 2014 년 북한을 이탈한 20 대 여성. 현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거주.

북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감시가 이루어진다. 본 장은 북한 정부가 “중국 손전화”
사용을 최대한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한 다양한 기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한 물리적 감시, 당국이 “피의자”로 간주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보위부원에 의한 조사, 통신 신호 교란 및 차단, 사용자 위치의 기술적
탐지, 통화내용 비밀녹음 등이 포함된다.

3.1 중국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감시

김정은 체제하의 감시 강화

통상적인 감시활동과 특별히 정보 및 전기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감시는 2011 년 12 월
김정은 집권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국내
안보 및 국경지대 경비가 상당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17 명 중
14 명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감시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
중에 북한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더 엄중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인터뷰 대상자 중 어린 편에 속하는 종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모두가 모두를 감시했습니다. 이웃 간에, 일터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가난한 집이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같은 특이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가 되면 지방 보안원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⁵⁶

북한 기관 요원들이 보기에 가구 지출의 현저한 증가는 북한 밖의 가족이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전에 북한에 거주했던 강미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등록주민 명부 중에 국가안전보위부가 특별 주시하는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감시합니다. 탈북자(북한을 이탈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가족은 따로 분류됩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역시 감시를 합니다. 기관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들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밤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⁵⁷

사람들이 북한을 이탈하는 것 외에 접경지대 감시가 강화된 다른 이유는 (북한 내에서 불법이지만 필요성이 있는) 사설, 회색시장 거래에서 “중국 손전화”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지은의 경우 북한에 있을 때 이러한 거래에 관여했다.⁵⁸

“사업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2014년)에는 진짜 힘 있는 사람들만이 불법 거래를 약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관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불법 거래는 필수적입니다. 룡강 지역은 공장이 없고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활을 하려면 이런 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 반복됩니다. 올해는 이런 거래에 대한 단속이 특히 심하고 통신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중국 손전화”의 사용은) 계속합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조심하는 거죠.”

인터뷰 대상자들은 접경지대에 추가적인 신호방해 장비 설치, 감시 시스템 강화, 최첨단 감시 장비 도입 등 당국이 시도한 여러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강미진 역시 중국 접경에 있는 혜산시 병원 내 인민무력부 연구시설로 위장된 방에서 “중국 손전화”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⁵⁹ 강미진 등 다수는 접경지대에서 주민들이 한국 등의

⁵⁶ 국제앰네스티와 종희(가명, 20대 여성, 2014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⁵⁷ 국제앰네스티와 강미진(현 데일리 NK 기자, 40대 여성, 2009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3월 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⁵⁸ 국제앰네스티와 지은(가명, 50대 여성, 2013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2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⁵⁹ 데일리 NK, “접경지대 감시를 위장하는 데 병원 활용돼”, 2014년 5월 9일, 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Id=nk01500&num=11849 (2015년 9월 15일 접속).

국가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산 전파 탐지기가 사용됐다고 언급했다. 이 중 일부는 전자기적 간섭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는 라디오 전파 방출을 통한 북한 당국의 중국 이동통신망에 대한 신호간섭일 수 있다. 연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전에 1990년대에는 (중국 이동통신망) 신호를 잡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중국제 휴대폰을 그만큼 일찍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2년, 2013년에는 신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깊숙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마 정부가 이런 전화기의 존재를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⁶⁰

감시 및 휴대폰 신호 교란은 북한 정부가 중국제 휴대폰을 사용해 전화통화를 하는 주민들 사이에 공포를 일으키려고 사용한 전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일부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감시 또는 회선 교란은 보통 통화 중 정전기적 신호로 나타나고 양측 통화자 모두에게 공포감을 일으킨다. 연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에서 아버지와 통화할 때 통화가 끊어졌는데 당국이 통화를 막으려고 라디오 신호간섭을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체포되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⁶¹

사람들 사이의 공포를 조장하는 방법에는 조금 덜 기술적인 방법도 있다. 북한 주민이 북한을 이탈한 가족 구성원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목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꾸며내는 식으로 말이다. 수예는 이 같은 전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을 떠날 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제 부모님을 시험하려고 제가 병원에 있고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는 병원에 확인하려고 찾아갔는데 죽은 사람이 40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부모님이 제 소재를 진짜로 모른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더 이상 미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⁶²

⁶⁰ 국제앰네스티와 연화(가명, 40대 여성, 2013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⁶¹ 국제앰네스티와 주양(20대 여성, 2010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2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⁶² 국제앰네스티와 수예(가명, 20대 여성, 2014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전술 역시 가족에 대한 괴롭힘의 일종에 해당한다.

휴대형 감시 장비 및 비밀 통화 녹음

인터뷰 대상자들은 북한 기관원들이 휴대전화 통신 감시에 각양 크기와 형태를 가진 휴대형 감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감시당한 경험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공한 정보와 북한에 거주한 시기를 비교해볼 때 구형인 배낭 크기의 대형 장비와 신형으로 기관원의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소형 장비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³ 인터뷰 대상자들은 새로운 감시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도입해온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했다.⁶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감시국으로도 알려진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특수 부서인 “27 국”은 “중국 손전화” 전파를 포착하기 위해 정교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⁶⁵ 이 같은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 은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27 국은 감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요원은 이 장비를 배낭에 넣고 붉은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탐지 장비라고 말했습니다. 27 국 요원이 저를 체포하러 왔을 때 코트를 벗었는데 몸에 전선이 감겨있었습니다.”⁶⁶

일본 아시아프레스 기자이자 북한 뉴스 취재 전문가인 이시마루 지로 역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평양 소재 27 국 비밀경찰은 비밀 첩보 및 디지털 작전 전문가들입니다. ‘외설적인 물건’을 단속하는 경우라면 도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합니다. 비밀경찰이 나타난다면 그건 정치적 사안으로 보는 것입니다.”⁶⁷

⁶³ 국제앰네스티와 박문(가명, 20 대 남성, 2011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2 월 26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⁶⁴ 인터뷰 중 습득한 제조 위치에 대한 정보는 대다수 소문에 의한 것이었다. 가능성이 있는 제조국으로 지목된 곳은 독일, 러시아, 중국, 미국이었다.

⁶⁵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UN doc. A/HRC/25/CRP.1, 2014 년 2 월 17 일. para 220, 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CoIDPRK/Report/A.HRC.25.CRP.1_ENG.doc (2015 년 10 월 15 일 접속).

⁶⁶ 국제앰네스티와 은미(가명, 40 대 여성, 2014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22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⁶⁷ 아시아프레스, “북한 연예인 총살형 - 북한 당국의 ‘정치적 비디오’ 단속”, 2013 년, www.asiapress.org/rimjin-gang/news/2014/01/30161103.html (2015 년 9 월 10 일 접속).

북한을 떠나기 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문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통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차세대 독일제 감시 장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비는 휴대폰 신호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북한에 소수만 존재합니다. 감시해야 하는 휴대폰 신호의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만 이런 장비를 가져옵니다. 이 장비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⁶⁸

일부 인터뷰 대상자는 이 장비를 사용해 대화 전체를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녹음된 대화 내용이 문자 형태로 재구성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실제 녹음된 내용을 듣거나 녹취록을 본 적은 없었다. 연희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안원이 걸어 다니면서 신호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호가 탐지되면 그 신호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앞으로 가서 통화를 녹음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통화내용에 대해서 취조합니다. 통화를 한 사람이 부인하면 녹음된 통화를 들려줍니다. 보통 통화를 한 사람은 전화기를 숨겨놓지만 녹음된 통화 때문에 제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⁶⁹

⁶⁸ 국제앰네스티와 박문(가명, 20 대 남성, 2011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2 월 26 일 진행됐다.

⁶⁹ 국제앰네스티와 연희(가명, 40 대 여성, 2013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8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연희(가명)는 북한 이탈 전에는 교사로 일했으며 2013 년 북한을 이탈했다. 사진은 2015 년 5 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촬영된 것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심의하는 유엔기구인 자유권위원회는 법률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간섭할 수 없으며 그 같은 법률 자체도 자유권규약의 모든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⁷⁰ 현재 그와 같은 규정은 북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의적인 감시나 권력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필요한 법률이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면 감시가 국가안보 보호 또는 중대범죄 대처 등 명시된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거나 정당한 대상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⁷⁰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16 호: 사생활 대한 권리, UN doc. CCPR/C/GC/16, 1998 년 9 월 28 일, para 3. 제 5 장 참조.

북한은 국제법과 기준에 맞도록 제한적인 통신 감시를 실시할 제도적, 법적 체계가 미비할 뿐 아니라 특히 정치적 의지가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 증언에서 상세히 다뤄진 전자적인, 또 그 외 어떠한 형태의 감시, 통신 차단, 도청, 통화녹음도 적법하거나 정당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없다. 이 증언들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감시의 자의성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자유권규약 제 17 조, 세계인권선언 제 12 조)⁷¹

감시 회피

북한 주민들은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 보안원에게 휴대폰 신호를 탐지당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고안해냈다. 일례로는 북한 외부와의 통화는 짧게 하고, 통화 중에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호 교란이나 탐지를 피하고 보안원들에게 물리적으로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저는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통화는 반드시 매우 짧고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특정 장소에 가야 했습니다.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저를 볼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⁷²

“중국 손전화”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어야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예방하고 북한에서는 희박한 전력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보통 배터리와 심카드는 전화기와 별도로 보관한다. 어떤 경우에는 심카드를 집 외부의 장소에 보관하기도 한다.⁷³ 이렇게하면 기관 요원들이 가택을 수색할 경우 무작위 테스트를 해도 전화기가 켜지지 않는다.

3.2 자의적 체포 및 뇌물 갈취

북한 주민이 “중국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다가 보위부원에게 발각되는 경우에는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 소경은 자신의 생각에 당국이 국제전화 신호를 탐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⁷¹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16 호: 사생활에 대한 권리, UN doc. CCPR/C/GC/16, 1998 년 9 월 28 일, para 8.

⁷² 국제앰네스티와 해주(가명, 40 대 여성, 2012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3 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진행됐다.

⁷³ 국제앰네스티와 광일(가명, 40 대 남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8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안 좋은 경우에는 장기 수감이 예상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좀 덜 한 경우에는 교화시설에 보내져 1~2년 정도 수감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넘어갑니다. 애초에 잡힌 것도 정부가 특수 장비로 신호를 탐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⁷⁴

북한 형법에 따르면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휴대전화 통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쉽사리 거간죄, 밀수죄, 심지어는 반역죄와 같은 형법 상의 모호한 범죄로 엮이게 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과의 통화는 더욱 그렇다. 연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단 체포되면 보안기관이 중국이나 한국에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기록을 모조리 살펴봅니다... 한국 사람에게 전화한 것이 발각되면 즉시 뇌물을 주고, 그 전화기는 중고로 구한 것이며 통화를 한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야만 풀려날 수 있습니다.”⁷⁵

통화를 도청당한 사람들은 국제적으로는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종희는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은 여성의 사례를 설명했다.

“제 어머니의 친구는 통화 내용이 발각돼서 단련대(노동을 통한 교화시설)에 끌려갔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는 체제 비판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해서였습니다. 그분은 단련대에 보내져 6개월간 사상 재교육을 받고 노동을 했습니다.”⁷⁶

비인가 통신 처벌

북한 형법(2012년 개정된 것)은 면대면이든 전화를 통해서든 외국인과의 통화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화내용이 반역죄(제 63 조), 외화의 개인적 매매(제 106, 107, 108 조), 암거래죄(제 111 조), 거간죄(제 112 조), 비법적인 상적행위(제 114 조, 115 조), 밀수죄(제 119 조)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역죄에 대한 가장 엄한 처벌은 사형이며 나머지 범죄의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로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통신법(2011년, 제 38 조)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와 개별 시민에게

⁷⁴ 국제앰네스티와 소경(가명, 40대 여성, 2005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3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다.

⁷⁵ 국제앰네스티와 연희(가명, 40대 여성, 2006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⁷⁶ 국제앰네스티와 종희(가명, 20대 여성, 2014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정상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같은 정상에는 전기통신수단을 타국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왔거나 매매한 경우부터 전기통신 이용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까지 다양한 사항이 포함된다.

인터뷰 대상자 다수에 따르면 뇌물이 통하기는 하지만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명이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가 보위부원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은 신문을 받고 풀려났지만 다른 한 사람인 은미의 경우는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없었고 국외에 있는 사람과 통신했다는 이유로 몇 주간 구금되었다.

“보위부원은 보통 청진에 파견되어있습니다. (체포된) 그 날 보위부원들이 접경지대에 있었습니다. 청진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위부원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철로 근처여서 기차를 기다리던 보위부원들이 제 휴대폰 신호를 탐지했고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전화통화는 약 8분 정도 됐습니다. 나중에 보위부원들은 저에게 그렇게 오래 통화를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한국의 누군가와와의 통신은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원에게 뇌물을 주면 서류를 조작해서 징역형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위부원들이 집에 왔을 때 휴대폰을 숨기려고 복도에 있는 쌀 포대에 넣었지만 얼마 있다가 발각됐습니다. 체포된 이후에 보위부원은 인민폐 3,000 위안(미화 475 달러)을 뇌물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겠다고 했지만 제 남편이 김정일과 같이 있는 사진을 보고는 자기들이 들어온 집이 고위 관료의 집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물을 받지 않고 그냥 보고해버렸습니다.”

은미는 보위부 구금시설로 보내져 20 일간 구금되었다.

“거기서 기본적인 필요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보위부원은 일부 수용자의 생리대를 빼앗아서 자기가 아는 지인에게 주었습니다. 제공된 식사는 옥수수죽뿐이었고, 식사를 가져온 이후에도 허락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 한 명은 허락을 받기 전에 먹었다가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체포 전에 돈을 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변에 돈이 섞여 나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제 남편은 연줄을 동원해 저를 꺼내줬습니다. 보위부 시설의 철제 게이트도 (제 남편이 있는 기관의) 건설일꾼들을 쓴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남편이 저를 꺼내줄 수 있었습니다.”⁷⁷

⁷⁷ 국제앰네스티와 은미(가명, 40 대 여성, 2014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22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44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어떠한 체포나 구금도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뇌물 갈취를 목적으로 한 체포도 마찬가지다.⁷⁸ 그러므로 외국에 있는 사람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주민을 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일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유권규약 제 9 조, 세계인권선언 제 9 조)

⁷⁸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35 호: 신체의 자유 및 안전, UN doc. CCPR/C/GC/35, 2014 년 12 월 16 일, paras 16, 17. 제 5 장 참조.

4. 기타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 및 감시

“보위부에는 109 그루빠⁷⁹로도
알려진 109 상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채널이 고정돼 있는지,
불법 CD 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정독(가명), 2013 년 북한을 이탈한 20 대 남성

4.1 휴대폰 이외 정보 출처에 대한 제한적 접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기타 국가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좀 더 최근에는 회색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배포 및 복제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담고 있는 DVD, USB 디스크, 기타 매체들이 반입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출처를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타국 방송 수신을 막기 위해 텔레비전에서 수신할 수 있는

⁷⁹ 러시아어 *Группа* 의 북한식 용어로 “그룹”을 의미한다.

채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 중 소수는 북한 외부의 방송을 시청, 청취하려면 등록되지 않고 밀수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구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20 대 남성인 정독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 방송이 수신되는 텔레비전을 가진 친구 집에 가서 방송을 봤습니다. 그냥 보통 텔레비전인데 안테나를 조정하면 한국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화질은) 꽤 선명했고 한국 드라마를 직접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텔레비전 채널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한국 방송을 수신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한 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⁸⁰

또 북한 정부는 한국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파를 적극적으로 교란시킨다. 도심지에서는 전파 교란이 폭넓게 이루어지며 전에 평양에 거주했던 남수는 도시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 알맞은 제품을 이용해야만 한국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양 시내에서는 전자기적 간섭 때문에 (한국) 텔레비전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도시에서 최소 20 킬로미터는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외국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파 간섭이 없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한국 라디오 전파를 차단하려고 간섭 신호를 발생하는 기기를 설치했고 텔레비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⁸¹

무역상인들은 가전제품 이외에도 중국에서 북한 내부로 DVD 를 밀수하는데 보통은 한국 내용물을 담고 있는 디스크에 당국의 승인을 받은 북한 영화 표지를 가짜로 씌워서 들여온다.⁸² 일부 북한 주민들도 외국 자료가 담긴 DVD 가 있는지 가택 수색을 받게 될 경우 당국 승인을 받은 자료를 시청하는 식으로 위장한다. 강미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DVD 플레이어가 가진 문제는 전기가 끊기게 될 경우 DVD 를 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안원이 오게 되면 먼저 전기를 끊고 집에 들어닥칩니다. 그 경우 아예 기계 자체를 숨기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발각됩니다. 발각되지 않으려고 동시에 다른 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하나는 합법적인 영상이고 나머지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보안원⁸³이 들어오면 한국 드라마를 보던 것은 감추죠. 그러면

⁸⁰ 국제앰네스티와 정독(가명, 20 대 남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3 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진행됐다.

⁸¹ 국제앰네스티와 남수(가명, 30 대 남성, 2011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3 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진행됐다.

⁸² 국제앰네스티와 수예(가명, 20 대 여성, 2014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9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⁸³ 인터뷰 도중 사용되었던 한국어 단어는 ‘보안원’으로 이는 인민보안부 요원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인민보안부는 북한에서 경찰 기능을 수행한다. 인민보안부의 임무는 법과 질서의 유지부터 교통

*북한 영화를 보고 있던 거로 판단하고 떠납니다.*⁸⁴

북한 정부는 DVD 플레이어 사용을 금지시켜려 했지만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이 명백해 보였다. 연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 정부는 DVD 플레이어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혜산 내 대다수 가구들은 아직도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2012 년 말 인민반 회의에서 DVD 플레이어가 압수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압수하고 싶어 했지만 압수당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찾아오면 그냥 DVD 플레이어를 숨겼습니다.*⁸⁵

좀 더 최근에는 USB 디스크와 휴대폰이 외국의 시청각 자료를 확산시키는 편리한 수단이 됐다. 이들 매체들은 크기가 작아서 보안원 단속 시 제거하고 숨기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수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 친구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중국제품이고 어떤 것은 북한제품이었습니다. 중국 것이 품질은 좋지만, 북한 것이 저렴합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중국제 컴퓨터를 가지고 USB 디스크에 영화를 복사합니다. 7, 8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드라마가 유통되는 주된 방식입니다.*⁸⁶

일부 비정부 기구들은 적극적으로 북한에 라디오, DVD, USB 디스크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서울에 소재한 북한전략센터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USB 디스크를 연간 2,000 개에서 3,000 개씩 보내고 있다. USB 디스크는 보통 행사인들이 습득해 회색시장에서 판매한다. 동 단체는 북한으로 USB 디스크를 보내기 이전에는 DVD와 라디오를 보내기도 했다.⁸⁷ 이런 방법이 북한으로 미디어 콘텐츠나 기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는 해당 자료를 습득하고 소비하는 이들을 감시와 체포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외국에서 제작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통제까지 다양하다.

⁸⁴ 국제앰네스티와 강미진(현 데일리 NK 기자, 40 대 여성, 2009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4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⁸⁵ 국제앰네스티와 연희(가명, 40 대 여성, 2013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8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⁸⁶ 국제앰네스티와 수예(가명, 20 대 여성, 2014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9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⁸⁷ 국제앰네스티와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4 월 2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간섭하는 것이기도 하다.(사회권규약 제 15 조 제 1 항 a 호)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권규약에 따른 “핵심” 의무의 일부로서 어떤 종류의 국경이든 관계없이 개인의 타문화 접근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⁸⁸ 현행 규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북한 정부에 의한 과도한 간섭에 해당된다.

4.2 외국 매체 이용에 대한 감시

북한의 현행 법률은 당국이 감시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타국에서 제작된 시청각 자료의 개인적 시청은 그것이 국가 당국이 적국으로 여기는 국가의 자료라 할지라도 시청 자체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북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감시 활동을 적법하게 정당화해주는 것도 아니다. 법적 근거는 물론 정당성도 부재한 상황에서 증언을 통해 드러난 것과 같은 일대일 감시 제도는 침해적인 제도이며 이웃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야를 막론하고 항시 영향을 미친다.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이웃 단위의 감시 활동인 인민반 활동은 주민들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청 습관에 대한 관찰까지 확대되었다. 각 인민반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국가보위부 정보원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든 수상한 활동을 보고하고 이웃을 관찰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또 외부세계의 텔레비전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당국의 감시활동이 있음을 확인해줬다. 전에 평양에 거주했던 남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민반장은 동네를 파악하고 있으며 각 가구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동네의 경찰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집에 외지 사람이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안부에 보고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하던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관행이 라디오와 외국 DVD 등 가구 내 불법적인 전자제품 사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⁸⁹

북한 정부는 인민반 외에도 자국민이 외부세계 매체를 접하는 문제를 다룰 전담 조직을 창설했다. 정독은 이러한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보위부⁹⁰에는 109 그루빠로도 알려진 109 상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텔레비전,

⁸⁸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1 호: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UN doc. E/C.12/GC/21, 2009 년 12 월 21 일, para 55(d).

⁸⁹ 국제앰네스티와 남수(가명, 30 대 남성, 2011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3 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진행됐다.

⁹⁰ 본 보고서의 저자는 109 상무의 상위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른 정보원은

라디오 채널이 고정돼 있는지, 불법 CD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들은 주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집에 방문해 바로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집에 있다면 들어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업무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우선순위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⁹¹

“109 상무”의 존재는 북한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 및 간섭을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는 것을 제한할 의도를 확인해준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주거에 대한 간섭은 자유권규약의 규정, 의도, 목적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것이어야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기술했다.⁹² 북한 당국의 감시 활동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자유권규약 제 17 조, 세계인권선언 제 12 조)

체포 및 기타 결과

북한 형법 제 185 조에 따르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사람은 최대 1 년까지 “로동단련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최대 5 년까지의 “로동교화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적들의 방송”과 “적지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다. 북한법률 전문가인 박정원 교수에 따르면 북한 외부에서 제작된 시청각 자료,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제작된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매매, 보관, 시청하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되어 처벌될 수 있다.⁹³

인터뷰 대상자 17 명 중 2 명은 외국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이 체포됐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두 사례 모두에서 체포된 사람은 풀려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해야 했다. 박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체포됐지만 제 친구들이 뇌물로 낼 돈을 모아줘서 북한 돈 200,000 원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현금 대신 현물로 뇌물을 준 사람들도

109 상무가 보위부 산하에서 활동한다는 언급은 없이 조선노동당이 설치한 조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⁹¹ 국제앰네스티와 정독(가명, 20 대 남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3 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진행됐다.

⁹²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16 호: 사생활에 대한 권리, UN doc. CCPR/C/GC/16, 1998 년 9 월 28 일, para 4.

⁹³ 국제앰네스티와 국민대 법학부 박정원 교수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27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있습니다.⁹⁴

연희는 자신의 딸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뇌물을 제공했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보안원들은 휴대폰에 있는 외국 소설이나 노래를 찾으러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뇌물을 주면서 ‘전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라고 말합니다... 한번은 제 딸이 일본 영화가 담긴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친구들끼리 복사해서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혜산에서는 워낙 불법행위가 많아서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국에) 우선순위가 아닙니다.”⁹⁵

“중국 손전화”로 전화를 하다가 체포된 이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비례성을 갖춘 사유에 근거해 정당하게 금지되지 않은 외부 정보의 추구 및 접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체포는 모두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⁹⁴ 국제앰네스티와 박문(가명, 20 대 남성, 2011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2 월 26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북한에서는 공식 환율과 다소 유동적인 암시장 환율이 공존하는 관계로 뇌물을 제공했던 시기를 정확히 집어내지 못한 이 경우는 북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환산하기 어렵다.

⁹⁵ 국제앰네스티와 연희(가명, 40 대 여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18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한국산 DVD 시청자 처형 관련 보도

“중국 손전화” 사용과 관련한 사형선고가 있었다는 보고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인터뷰 대상자 중 최소 3 명이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거나 포르노로 분류되는 시청각 자료를 시청, 매매, 복제한 것과 관련해 처형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서 언급했다. 국제앰네스티도 금지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유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⁹⁶

시청각 자료와 관련한 단발적 처형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지만 정확한 정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런 처형이 시청각 자료의 단순한 시청이나 이용 때문인지, 아니면 밀수로 인한 것인지, 혹은 그저 당국이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나 즐길 거리를 보거나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포의 도구로 활용한 보고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정독은 국제앰네스티에 아내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과 함께 포르노 영상을 보다가 발각된 남성이 공개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⁹⁷ 이 남성의 처형은 시내 전 주민이 처형장면을 보기 위해 소집된 가운데 혜산 공항에서 이루어졌으며, 발각된 여성들은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사건의 시기는 일본 매체의 처형 소식 보도 시기와 일치한다. 이 매체는 이 남성이 ‘외설적 녹화물’을 반입,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⁹⁸ 이는 아마도 포르노 자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나 후에 일부 서방 매체들은 이를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외 다른 2 명은 한국에서 제작된 영상을 배포하거나 시청한 이유로 처형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 은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DVD 를 밀수한 이 사람은 2010 년 간첩 혐의로 처형됐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의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모두들 일종의 밀수행위를 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며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한국 DVD 밀수로 처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물품을 밀수하는 것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⁹⁹

⁹⁶ 국제앰네스티, *2013 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문서번호: ACT 50/001/2014).

⁹⁷ 국제앰네스티와 정독(가명, 20 대 남성, 2013 년 북한 이탈)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3 월 3 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진행됐다.

⁹⁸ 이시마루 지로, “‘불순한 녹화물’ 유포가 혜산과 청진에서 처형으로 이어지다”, 2013 년 11 월, www.asiapress.org/rimjin-gang/news/2014/01/30155011.html (2015 년 10 월 15 일 접속).

⁹⁹ 국제앰네스티와 은미(가명, 40 대 여성, 2014 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 년 5 월 22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수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진에 살던 제 친구의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듣다가 잡혀서 공개처형됐습니다. 진짜 믿을만한 친구한테만 공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때는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였습니다. 북한 정부는 노동당 그룹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이 발표는 공식적으로 다른 그룹(인민반)을 통해 전해졌지만 제가 살던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 정부는 자기들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한국 드라마 시청에 대해 경고하려고 처형을 한 것입니다. ... 저는 공개처형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가 속한 인민반에서도 같은 정보가 돌았고 제 어머니가 속한 인민반도 같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정보는 사실입니다. 발표는 보통 인쇄되어 곳곳에 게시됩니다. 내용 자체는 교육이나 자아비판 때 발표되었습니다.”¹⁰⁰

이 같은 처형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당국이 개인이 이런 자료를 접하는 것을 억제하고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정보나 문화 상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영상과 DVD를 매매하거나 이용하면 처형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 유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¹⁰⁰ 국제앰네스티와 수예(가명, 20대 여성, 2014년 북한 이탈)와의 인터뷰. 인터뷰는 2015년 5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5. 국제법·기준상 북한 정부의 책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9 조

북한은 다수 유엔 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자국 영토 및 관할권, 권한, 통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북한은 1981 년 9 월 14 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 가입했다. 북한은 1997 년 8 월 23 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보했으나 동 규약에는 탈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에 보낸 비망록^{Aide}

mémoire에서 그 같은 조치는 모든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¹⁰¹ 북한은 이 같은 조약 해석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 이후인 1999년 12월에 자유권규약상 규정된 의무에 따라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¹⁰²

북한의 조약상 의무

북한은 다음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1981년 9월 14일 가입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1981년 9월 14일 가입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1990년 9월 21일 비준
-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2001년 2월 27일 가입
- 아동의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14년 11월 10일 비준

북한은 이외에도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비준하지는 않았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권규약 제19조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명시된 원칙을 재천명하며 구체화하는 것이다.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감시할 임무를 가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명시했듯이 당사국은 반드시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상과 의견에 대해 표현하고 전달받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시청각 방식과 전자적 혹은 인터넷 기반의 표현 방식”이 포함된다.¹⁰³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은 제19조 제3항에

¹⁰¹ 유엔 사무총장, 1997년 9월 23일자 “비망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보에 첨부*, UN doc. C.N. 467.1997.TREATIES-10,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CN/1997/CN.467.1997-Eng.pdf> (2015년 12월 1일 접속).

¹⁰² 유엔 자유권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제2차 정기보고서*, UN doc. CCPR/C/PRK/2000/2, 1995년 12월 25일 북한 정부 제출,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CPR%2fC%2fPRK%2f2000%2f2&Lang=en, (2015년 9월 29일 접속).

¹⁰³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4호: 의사·표현의 자유, UN doc. CCPR/C/GC/34, 2011년 9월

명시된 바와 같이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어야 하며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나 평판과 같은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비례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모든 제한조치가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덜 침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반역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법 규정이 사실상 국가안보를 위해 하지 않는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당사국은 매체를 독점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¹⁰⁴

전 장에서는 관련 기술이 가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에 의한 “정보의 절대적 독점”¹⁰⁵에 감시받지 않는 외국 거주자와의 전화 통화, 외국 매체 및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는 데 모호하게 규정된 법률을 활용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정부에 의한 남용을 막을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세계와의 정보 교환을 추구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한 제한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국가에 의한 침해적 감시활동과 발각된 이들에 대한 잠재적으로 엄한 처벌로 강제된 것이다. “국가안보”나 “도덕”의 보호와 같은 개념은 자유권규약 제 19 조에 규정된 제한에 대한 틀거리를 무력화하는, 전적으로 불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난 자의적 방식으로 남용되었다. 다시 말해 금지에 기본을 둔 제한이 일반적이었고 최소한의 자유가 예외적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자유권규약상의 의무로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자유권규약 제 17 조 제 1 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더해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⁰⁶ 통신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과 같은 기타 현대적 기술 수단을 이용한 통신이 포함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무결성과 비밀성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감시, 도청, 녹음도 금지하며, 이에 대한 규제와 제한은 형사사범의 집행의 예와 같은 일정한 예외적 상황에만

12 일, paras 11, 12.

¹⁰⁴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34 호: 의사·표현의 자유, UN doc. CCPR/C/GC/34, 2011 년 9 월 12 일, paras 23-34, 40.

¹⁰⁵ 유엔 인권이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 UN doc. A/HRC/RES/28/22, 2015 년 4 월 8 일, OP1(a),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28/L.18 (2015 년 9 월 29 일 접속).

¹⁰⁶ 유엔 총회,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UN doc. A/RES/68/167, 2014 년 1 월 21 일, 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8/167, 유엔 인권이사회,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UN doc. A/HRC/RES/28/16, 2015 년 4 월 1 일, www.un.org/Docs/journal/asp/ws.asp?m=A/HRC/RES/28/16 (두 자료 모두 2015 년 12 월 15 일 접속)

허용된다.¹⁰⁷ 그러한 경우에조차 국가 당국에 의한 법률과 결정의 승인은 구체적이며 비례성을 갖춰야 하며, 효과적인 안전장치로 견제돼야 한다. 국가의 간섭은 “법률에 의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러한 법률 자체도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을 상세히” 특정해야 한다.¹⁰⁸ 통신에 대한 모든 감시는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법률은 공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충분한 명확성을 갖춰 당국이 그러한 감시 조치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 요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남용을 막을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규정해야 한다.¹⁰⁹ 동 규약 제 17 조는 법에 따른 경우이라도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자의성의 개념은 법률에 따른 간섭이라도 동 규약의 규정, 의도, 및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그 특정한 상황에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다.”라고 밝혔다.¹¹⁰ 북한 당국의 법률 및 관행은 기본적으로 제 17 조의 모든 측면을 침해한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이 체신소나 가정에서 통신하고 소비하는 정보를 침해적으로 감시하는 것 외에도 휴대폰을 통한 국제전화의 사실상 전면 금지 조치 역시 사람들이 외국에 사는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사적인 통신을 할 기회를 부당히 박탈하는 것이다.

또 자유권규약 제 9 조는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에서 사람들을 보호한다. “의사·표현의 자유(제 19 조) ... 사생활에 대한 권리(제 17 조)를 포함해 이 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한” 모든 체포나 구금은 “자의적인 것”이며 뇌물 갈취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체포도 마찬가지다.¹¹¹ 북한 당국은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뇌물 갈취와 같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로 금지된 것이 아닌 외부세계의 정보를 추구하고 전달받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반적 관행은 구체적이고 비례성을 갖는 사유를 갖추도록 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모든 정보 접근권의 부재와 그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 제약은 교육에 대한 권리와

¹⁰⁷ 유엔 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프랑크 라 뢰* / Frank La Rue, UN doc. A /HRC/17/27, 2011 년 5 월 16 일, paras 57, 59,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7_en.pdf (2015 년 11 월 20 일 접속).

¹⁰⁸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16 호: 사생활에 대한 권리, UN doc. CCPR/C/GC/16, 1998 년 9 월 28 일, paras 3, 8.

¹⁰⁹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UN doc. A/HRC/27/37, 2014 년 6 월 30 일, para 28.

¹¹⁰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16 호: 사생활에 대한 권리, UN doc. CCPR/C/GC/16, 1998 년 9 월 28 일, para 4.

¹¹¹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35 호: 신체의 자유 및 안전, UN doc. CCPR/C/GC/35, 2014 년 12 월 16 일, paras 16, 17.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로 인한 혜택을 누릴 권리 등 광범위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¹¹² 사회권규약 제 15 조 제 1 항 a 호는 당사국에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참여”한다는 표현이 그 자체로 “인간 존재의 모든 표현을 망라하는 폭넓고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여기에는 문화생활에 “접근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의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한 표현 및 배포의 형태에 대해서 배울 권리”가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은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필수 조건이며 여기에는 이같은 권리의 향유가 모든 사람에게 물리적, 재정적으로 도달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선택하는 언어의 모든 문화 표현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공유할 권리, 또 공동체의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들의 접근”이 포함된다.¹¹³ 문화 및 과학적 진보에 대한 권리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접근과 사용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¹¹⁴

더 나아가 사회권위원회는 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존중은 인간 존엄성과 세계 속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이며 비간섭과 긍정적 조치 모두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동 위원회는 또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로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 권리의 향유를 간섭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면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에 본질적으로 연결된 권리 중 하나인 자유권규약 제 19 조에 명시된 자유를 존중하도록 의도된 조처를 택할 필요성을 사실상 포함시켰다.¹¹⁵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조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그것이 정당한 목적과 엄격한 필요성에 따른 것인지,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다른 부분에 명시된 사항 등 기타 인권법 기준에 부합되는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¹¹⁶ 사회권위원회는 외국 출판물과 인터넷 등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당사국에 정보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자국 관할권 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¹¹² 유엔 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프랑크 라 뢰*/Frank La Rue, UN doc. A /HRC/17/27, 2011 년 5 월 16 일, para 22,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7_en.pdf (2015 년 11 월 20 일 접속).

¹¹³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1 호: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UN doc. E/C.12/GC/21, 2009 년 12 월 21 일, paras 15(b), 16(b), 68.

¹¹⁴ 유엔 인권이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권리”, UN doc. A/HRC/20/26, 2012 년 5 월 14 일, para 19, 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0/A-HRC-20-26_en.pdf (2015 년 12 월 15 일 접속).

¹¹⁵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1 호: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UN doc. E/C.12/GC/21, 2009 년 12 월 21 일, paras 1, 6, 48, 49(b).

¹¹⁶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1 호: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UN doc. E/C.12/GC/21, 2009 년 12 월 21 일, paras 19, 46, 65.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¹¹⁷

사회권규약에는 당사국이 문화생활에 참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 2 조 제 1 항, 제 15 조 제 2 항) 여기에는 폭넓은 판단의 여지 *margin of discretion*가 개입되지만 동시에 당사국은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각각의 권리를 적어도 최소 필수 수준으로는 충족시킬 “핵심” 의무를 가지기도 한다. 제 15 조와 관련해 이는 국가가 차별 없이, *어떤 종류의 국경이든 관계없이*, 개인의 고유문화 및 *타문화* 접근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⁸ 더 나아가 국가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해 기업을 포함하여 사적 단체의 책임을 규제해야 한다.¹¹⁹

이 종류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가 아직까지 많은 국제적 관심을 끌지 못했고 인간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정보에 동등한 접근에 대한 포괄적 제한에 포함되는 부분이며,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¹²⁰

앞서 언급한 국제조약에 포함된 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특히 제 9 조(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제 12 조(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의 자의적 간섭), 제 19 조(의사·표현의 자유), 제 27 조 제 1 항(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를 누릴 권리)에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위 조항들은 국제관습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모든 국가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북한은 스스로 자유권규약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 및 그 관할권 내 있는 시민과 비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가진 위 권리의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 ^{Frank La Rue}에 따르면 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 제 19 조는 “개인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미래의 기술적 발전사항을 포함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전망을 가지고

¹¹⁷ 유엔 사회권위원회,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최종견해*, UN doc. E/C.12/1/Add.107, 2005 년 5 월 13 일, paras 39, 68.

¹¹⁸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1 호: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UN doc. E/C.12/GC/21, 2009 년 12 월 21 일, paras 55, 66. (강조 추가)

¹¹⁹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1 호: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UN doc. E/C.12/GC/21, 2009 년 12 월 21 일, para 73.

¹²⁰ 유엔 총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UN doc. A/RES/69/188, 2015 년 1 월 21 일, , OP 2(v), 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9/188 (2015 년 12 월 10 일 접속).

입안"되었다.¹²¹ 그러므로 국제인권법의 틀거리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통신 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터넷과 같이 참여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플랫폼은 독립적 매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속한 개인이 비판적 견해를 공유하고, 객관적 정보를 찾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경제·정치적 변화에 관한 공공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케한다. 특히 소외된 집단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인터넷 또는 기타 정보나 표현의 수단에 대한 폭넓은 접근은 국가 간 존재하는 불평등을 철폐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의 의견에 따르면 인권과 발전의 불가결한 도구로써 인터넷의 역할을 함께 고려한다면, 표현의 자유(및 이와 관련된 수단)를 증진시키고 촉진시킬 국가의 의무란 인터넷이 모든 주민 계층에게 폭넓게 보급되고 접근성을 가지고 알맞은 가격에 제공될 수 있도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²

¹²¹ 유엔 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프랑크 라 루*/Frank La Rue, UN doc. A /HRC/17/27, 2011 년 5 월 16 일, para 21,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7_en.pdf (2015 년 11 월 20 일 접속).

¹²² 유엔 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프랑크 라 루*/Frank La Rue, UN doc. A /HRC/17/27, 2011 년 5 월 16 일, paras 2, 19, 57, 62, 66, 85,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7_en.pdf (2015 년 11 월 20 일 접속).

60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6. 결론 및 권고

“제가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아주 어릴 때 봤던 한국 비디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북한에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게 바로 북한 정부가 정보를 차단하는 이유입니다. 비밀을 유지하려고요.”

수예(가명), 2014 년 북한을 이탈한 20 대 여성

국제앰네스티의 연구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내 일부 지역에 정보통신 기술을 제한적으로 도입했음에도 사실상 자국민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할 더 큰 자유를 허용할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대다수 북한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제한된 접근을 통한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월드와이드웹을 접속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국외 거주 가족과 사업 상대 등과 자유롭게 통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 망에 접속되는 밀수된 휴대폰이나 “브로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국제전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들은 전기통신에 대한 통제권 행사를 위해 편성된 전담조직에게 감시와 체포를 당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에 처해있다.

동시에 북한 정부는 자국 내 독립적인 언론이나 매체를 허용하지 않고 사실상 타국 언론이나 매체를 허용하지 않아 자국민이 접하는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텍스, USB 디스크, 휴대폰을 이용해 외부세계에서 제작된 시청각 자료를 접할 실질적 가능성이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일대일 감시나 국가에 의한 감시제도는 개인의 사생활 및 가정 깊숙이 침투하며 감시 대상이 자의적 체포나 구금, 엄한 처벌을 당하는 일도 잦다.

국경을 넘어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하는 것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감시 및 기타 형태의 방해 및 괴롭힘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조치가 정부를 시민운동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으로부터 보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질지는 몰라도 이는 인권의 향유를 대가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이 같은 제한은 북한과 타국 사람들 간 쌍방의 오해를 영속화하는 것이며 북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이들은 젊은 세대의 교육, 농업 생산, 국내 및 국제 거래, 외부 세계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연락 유지 등 정보 및 전기통신 기술이 일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주었다. 생계유지를 위한 사설적인 회색경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은 휴대폰을 이용한 국제전화나 외부세계 정보에 대한 제한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사상의 자유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권리와 같은 다른 인권의 실현을 위해 이러한 제한이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방해와 괴롭힘은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접하는 것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권고사항

북한 내 의사,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목을 받았으며 2015 년 초 인권이사회는 여러 사안 중에서 북한인권조사위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정보의 절대적인 독점을 통한 의사, 표현, 결사의 자유의 ... 부정”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부에 “독립적 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¹²³

국제앰네스티는 이 같은 권고내용에 더해 북한 정부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제한을 철회하고 국가 내외부의 개인과 집단 간 간섭 없는 정보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¹²³ 유엔 인권이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 “, UN doc. A/HRC/RES/28/22, 2015 년 4 월 8 일, OP1(a), 2(a),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28/L.18 (2015 년 9 월 29 일 접속).

촉구한다. 북한은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각 사람에게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한 이들에게 괴롭힘, 위협,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 처형을 중단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거나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금지 조치를 중단할 것.
- 북한 주민들에게 월드와이드웹, 국제 인터넷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검열되지 않는 접속을 허용할 것.
- 독립적 신문 및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 및 외국 매체에 대한 모든 검열을 중단할 것.
- 타국의 대중문화를 포함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국제 통신, 외국 방송 및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
- 불필요하고 불특정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통신 감시를 중단할 것.
- 국제인권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내 모든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 등 가족 구성원 및 그 외의 사람들과 간섭없이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법률이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국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형법 제 185 조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법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
- 정보통신기술 접근의 모든 장벽을 즉시 제거하는 등 국내적, 국제적으로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북한 정부는 합작투자사업파트너와의 노력 등을 통해 다음을 실시해야 한다.

- 국제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제한으로, 감호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사법당국이 특정인에게 명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 북한 휴대폰 구입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모든 이들이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얻는 “거간꾼”을 통할 필요없이 합당한 기간 안에 공인된 판매점을 통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정보 및 통신 수단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알맞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해갈 것.
- 사업파트너와의 협조하에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된 기업 부문의 책임을 규제할 것.
- 무료 공공 인터넷 중계기를 도입하거나 이의 보급을 확충하고 학교나 기타 공공시설에서 인터넷 접속이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조직입니다.
한 사람이 겪는 불의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연락처

 info@amnesty.org

 +44 (0)20 7413 5500

소셜네트워크

 www.facebook.com/AmnestyGlobal

 @AmnestyOnline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남아있다. 국가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정부의 모든 부문을 지휘하고 일상의 모든 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발휘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통신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내외로의 정보 출입을 통제한다.

1990년대의 극심한 식량난 이후로 북한으로 식량을 밀수하던 상인들은 휴대폰과 심카드 등의 다른 물품들도 반입했다. 중국 국경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우체국에 있는 감시되는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수된 DVD나 기타 매체 등을 통해서 외국 TV 드라마와 영화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본 보고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인터뷰 및 학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근본적 요소인 국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부정해왔는지를 드러낸다.